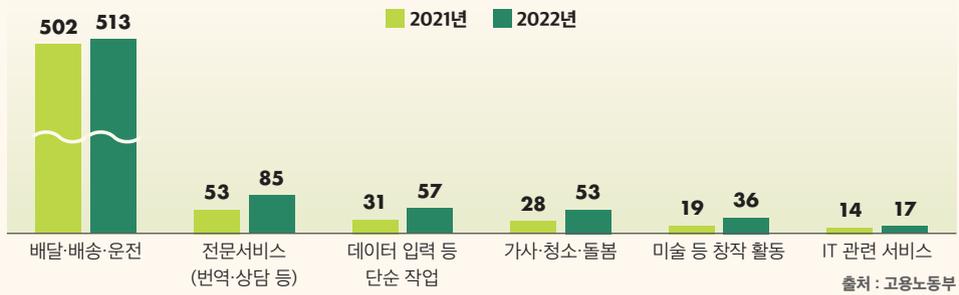


데이터로 읽는 플랫폼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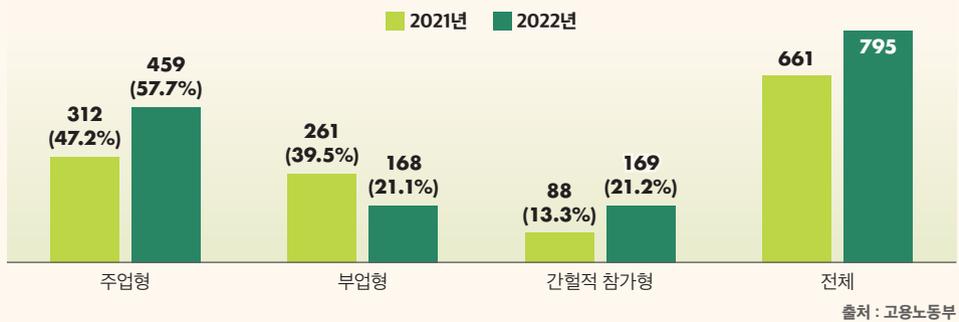
플랫폼 노동자 직종별 규모 변화

단위 : 천명



플랫폼 노동 주업·부업 유형별 규모 변화

단위 : 천명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대상(2023년)

특수고용 노동자 14개 직종 +환경 미화원				
택배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배달종사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대리운전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건설기계운전자	학습지 방문강사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환경미화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출처 : 고용노동부

플랫폼 노동자 80만 명 돌파 남성 74.3%·여성 25.7%

플랫폼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디지털 네트워크로, 플랫폼 노동은 지역 및 웹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배달·배송·돌봄 등 온라인에서 주문을 받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지역 기반형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며, 문서 작성·번역 등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받고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웹 기반형 플랫폼 노동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2021년 약 66만 명에서 약 80만 명으로 늘었으며, 이중 남성이 74.3%, 여성이 25.7%로 조사됐다.

플랫폼, 노동권의 사각지대 계약서조차 없다!

플랫폼 노동자 중 57.7%는 주업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47% 증가한 수치이다. 간헐적 참가형의 비중은 21.2%로 2021년 대비 91.9% 증가했으나, 부업형의 비중은 21.1%로 2021년 대비 35.8% 감소했다. 플랫폼 노동 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 또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3.4%로 2021년(42.3%) 대비 크게 늘었다. 노동권 공백이 우려되는 지점으로,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함을 방증하고 있다. 물론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6.4%(2021년 29.1%), 산재보험 가입률은 36.5%(2021년 30.1%)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미미한 수치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이 시급

플랫폼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로 법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 그나마 2021년 7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12개 유형의 특수고용 노동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으며, 2022년 1월에 서야 배달 등의 플랫폼 노동자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한편, 플랫폼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되려면 '한 사업장에서 한 달 소득 115만 원, 노동시간 93시간' 등의 '전속성'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2022년 5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돼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2022년부터 시작된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을 이용한다면,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플랫폼 영역을 아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